



수 원 지 방 법 원

제 2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3구합75813 가산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장○○
피 고 ○○시장
변 론 종 결 2024. 12. 5.
판 결 선 고 2024. 12. 19.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가산세 부과처분 결정세액 24,368,740원을 초과하는 가산세 부과처분의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3. 28. 원고에게 한 가산세 28,559,8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토지 매매계약 및 권리의무승계계약

1) 원고는 2018. 10. 15.경부터 ○○시 B에서 'C마트'라는 상호의 상점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이다.

2) 소외 D은 2017. 12. 4. ○○○○○○공사와 사이에 ○○시 E 대지 1,09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¹⁾에 관하여 매매대금 3,894,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위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2017. 12. 4. 계약보증금 389,400,000원, 2018. 6. 4. 1차 중도금 876,300,000원, 2018. 12. 4. 2차 중도금 876,100,000원, 2019. 6. 4. 3차 중도금 876,100,000원, 2019. 11. 29. 잔금 876,100,000원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었다.

3) 원고는 2018. 5. 16. D, ○○○○○○공사와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한 D의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원고가 승계하기로 하는 내용의 권리의무승계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권리의무승계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의 매매대금 지급 및 취득세 신고

1) ○○○○○○공사는 2018. 7. 3.경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 및 이 사건 권리의무승계계약에 따른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이 다음 표 기재와 같이 납부되었다는 내용의 토지대금납부확인서와 함께 완납일을 2018. 7. 3.로 한 토지대금완납확인서를 교부하였다.

1) 이 사건 토지는 2022. 10. 25. 토지개발사업이 완료되어 더 이상 해당 지번이 존재하지 않고, 신규지번인 ○○시 F 대지 1,093㎡에 대하여 ○○○○○○공사가 2022. 11. 14.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가, 원고의 명의로 2022. 12. 16.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을 제8호증 조세심판결정문 9쪽 참조). 위 G(도로명 주소 : ○○시 B)은 원고의 본점 소재지이다.



(단위:원)

회차	납부일	수납인정액	할부이자	연체이자	선납할인금	입금합계
4	2018.07.03.	6,816,260	0	0	0	6,816,260
4	2018.06.29.	869,283,740	0	0	238,150	869,045,590
3	2018.06.29.	876,100,000	0	0	240,020	875,859,980
2	2018.06.29.	876,100,000	0	0	240,020	875,859,980
1	2018.06.29.	486,900,000	0	2,334,450	0	489,234,450
1	2018.06.04.	389,400,000	0	0	0	389,400,000
0	2017.12.04.	389,400,000	0	0	0	389,400,000
합계		3,894,000,000	0	2,334,450	718,190	3,895,616,260

2) 원고는 2018. 8. 30.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신고를 하였다. 당시 원고가 작성한 취득세 신고내역(갑 제6호증, 을 제1호증)에 따르면 원고의 대리인 H는 소재지와 토지의 면적, 신고일, 신고인 및 대리인 부분을 자필로 기재하였고 이 사건 매매계약서, 이 사건 권리의무승계계약서, 토지대금 납부확인서 및 완납확인서 등이 첨부서류로 제출하였다(이하 '이 사건 신고'라 한다). 이를 토대로 작성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기한 후 신고서(갑 제7호증)에는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취득일이 2018. 6. 29., 취득가액이 3,893,281,810원으로 각 기재되어 있고, 취득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후 취득세를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가산세 합계 11,759,250원을 포함한 합계 144,130,820원의 취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자세한 신고·납부 내역은 다음 표와 같다.

[표 삽입을 위한 공백]

(단위:원)

취득가액(취득일)	세목	본세	가산세 (무신고)	가산세 (납부지연)	합계
3,893,281,810 (2018. 6. 29.)	취득세	116,798,450	11,679,840	70,070	128,548,360
	농어촌특별세	7,785,560	0	4,670	7,791,230



	지방교육세	7,786,550	0	4,670	7,791,230
합 계		132,370,560	11,679,840	79,410	144,130,820

다. 피고의 취득세 등 부과·고지

1) 피고는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신고 당시 프리미엄 등 52,334,950원을 과세표준에서 누락하고, 이 사건 토지의 취득 당시 지목이 농지가 아닌 대지임에도 구 지방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 제7호 가.목이 정하는 농지에 대한 세율(1천분의 30)을 적용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에 피고는 2023. 1. 3. 원고에게 위 취득비용을 반영하고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1천분의 40)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등에 가산세를 포함한 금액 합계 77,308,320원(= 취득세 65,913,950원 + 농어촌특별세 147,100원 + 지방교육세 11,247,270원, 가산세 포함)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하였다.

2) 원고가 위 통지에 불복하여 2023. 2. 2. ○○도지사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도지사는 2023. 3. 22. 불채택결정을 하였다.

3) 이에 따라 피고는 2023. 3. 28. 무신고 가산세 및 납부지연 가산세 합계 28,559,800원(= 취득세에 대한 무신고 가산세 8,205,240원 + 취득세에 대한 납부지연 가산세 16,998,390원 +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납부지연 가산세 43,230원 + 지방교육세에 대한 납부지연 가산세 3,312,940원)(이하 위 28,559,800원을 '이 사건 가산세'라 한다)을 포함하여 다음 표 기재와 같이 취득세 등 합계 77,686,590원을 원고에게 부과·고지하였다(이하 '2023. 3. 28.자 부과처분'이라 하고, 2023. 3. 28.자 부과처분 중 가산세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단위:원)

취득가액(취득일)	세목	본세	가산세 (무신고)	가산세 (납부지연)	합계
3,945,616,760 (2018. 6. 29.)	취득세	41,026,220	8,205,240	16,998,390	66,229,850
	농어촌특별세	104,670	0	43,230	147,900
	지방교육세	7,995,900	0	3,312,940	11,308,840
합 계		49,126,790	8,205,240	20,354,560	77,686,590

라. 조세심판원의 결정 및 일부 환급

1) 원고가 2023. 3. 28.자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23. 6. 22.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을 청구하였다. 조세심판원은 2024. 7. 3.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취득일은 2018. 6. 29.가 아닌 최종 잔금지급일인 2018. 7. 3.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원고는 60일 이내에 취득신고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신고에 따라 원고가 납부한 가산세 합계 11,759,250원(= 무신고 가산세 11,679,840원 + 납부지연 가산세 70,070원)은 환급되어야 하나, 지목과 현황이 대지인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농지 취득세율을 신고한 것은 원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세 등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2023. 3. 28.자 부과처분은 원고가 2018. 8. 30. 신고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의 가산세 11,759,250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2) 이에 따라 피고는 2024. 7. 12.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취득일을 2018. 6. 29.에서 2018. 7. 3.로 정정하여 이 사건 신고 당시 과오납된 가산세 11,759,250원에 대하여 세액 경정결정하고 환급처리하였다.

3) 그리고 피고는 2024. 11. 14. 위와 같은 취득일 정정에 따라 2023. 3. 28.자 부과처분에 관하여 무신고가산세(20%)를 과소신고가산세(10%)로 정정하고 납부지연 가산



세를 정정하는 내용의 다음 표 기재와 같은 결정을 하고, 이 사건 가산세 중 4,191,060원을 환급하였다.²⁾

(단위:원)

취득가액(취득일)	세목	본세	가산세 (과소신고)	가산세 (납부지연)	합계
3,945,616,760 (2018. 7. 3.)	취득세	41,026,220	4,102,620	16,924,540	62,053,380
	농어촌특별세	104,670	0	43,040	147,710
	지방교육세	7,995,900	0	3,298,540	11,294,440
정정 합계 (ㄱ)		49,126,790	4,102,620	20,266,120	73,495,530
2023. 3. 28.자 부과처분 합계 (ㄴ)		49,126,790	8,205,240	20,354,560	77,686,590
차액 (ㄴ)-(ㄱ)		0	4,102,620	88,440	4,191,06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 을 제1호증, 제3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취득일은 2018. 7. 3.임에도 피고 담당 공무원은 2018. 6. 29.를 취득일로 보아 이 사건 신고 당시 원고로 하여금 11,759,250원의 가산세를 과오납하게 하였다. 이와 동일하게 이 사건 신고 당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대지가 아닌 농지의 세율이 적용된 것 역시 피고 담당 공무원의 착오로 인한 것임에도, 피고는 원고가 대지를 농지로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2023. 3. 28.자 부과처분 당시 가산세 합계 28,270,77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원고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 법령

2) 변론종결 이후 피고는 2024. 12. 12.자 참고서면 제출을 통해 환급 가산세(본세) 4,191,060원, 가산금 157,150원, 환급이자 305,640원 합계 4,650,850원을 2024. 11. 14. 환급기준일 당시 원고의 체납액(주민세 본세 체납액 637,690원, 재산세 본세 체납액 12,299,990원 중 4,013,160원)에 충당하였다고 설명하면서 지방세환급금 충당 및 지급통지서를 첨부자료로 제출하였다.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소 중 직권취소된 세액에 대한 가산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부에 관한 직권 판단

가. 관련 법리

감액경정처분이 있게 되면 세액의 일부 취소라는 효과가 발생하게 되므로, 감액경정결정에 의해 이미 취소된 세액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2두 7370 판결,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조세심판결정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신고 당시 원고가 납부한 가산세 11,759,250원을 환급한 다음 2024. 11. 14. 2023. 3. 28.자 부과처분 중 이 사건 가산세 합계 28,559,800원을 24,368,740원(= 취득세에 대한 무신고 가산세 4,102,620원 + 취득세에 대한 납부지연 가산세 16,924,540원 +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납부지연 가산세 43,040원 + 지방교육세에 대한 납부지연 가산세 3,298,540원)으로 감액하는 결정을 하고, 위 가산세액과 이 사건 가산세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4,191,060원(= 29,559,800원 - 24,368,740원)을 원고에게 환급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처분에서 위와 같이 직권취소되고 남은 총 가산세 결정세액 24,368,740원(= 이 사건 가산세 28,559,800원 - 환급세액 4,191,06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취소청구는 이미 취소되어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5.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나머지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관련 규정 및 법리

1) 구 지방세기본법(2018. 12. 24. 법률 제160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납세의무자가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3두10350 판결).

나.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기초하여 보건대,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에 을 제2호증의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고가 취득세를 과소신고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1) 취득세는 납세자가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여 신고·납부하는 조세로서, 원칙적으로 그 신고·납부에 대한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고,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에게 자진신고납부서나 신고납부용고지서를 교부하는 행위나 그 과정에서 납세의무자에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에 관한 사항을 안내 또는 설명하거나 보완을 요구하는 행위는 납세의무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단순한 사무행위일 뿐,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는 조세부과처분이 아니다. 따라서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에 있어 세무공무원이 그 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그 신고의 적법 여부를 심사하여 신고 내용의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해야 할 의무는 없으므로, 취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1조는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각 목의 '농지'는 '취득 당시 공부상 지목이 논, 밭 또는 과수원인 토지로서 실제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제1호), '취득 당시 공부상 지목이 논, 밭, 과수원 또는 목장용지인 토지로서 실제 축산용으로 사용되는 축사와 그 부대시설로 사용되는 토지, 초지 및 사료밭'(제2호)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가 2018. 7. 3.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은 대지였고, 2017~2019년경 이 사건 토지 주변을 촬영한 항공사진에 따르면 실제 이용상황 역시 대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며, 농경지로 볼 수 있는 사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3) 그럼에도 이 사건 신고 당시 작성된 취득세 기한후 신고서(갑 제7호증)와 피고로부터 교부받은 취득세 납부서 및 영수증(갑 제8호증)에는 취득원인이 '유상취득(농지)'으로 기재되어 있고, 세율 역시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가.목의 세율(1천분의 30)이 적용되어 있다.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의 대리인이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 등을 믿었다 하더라도 이는 관계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두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위 각하되고 남은 나머지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앞서 본 것과 같이 2023. 3. 28.자 부과처분에서 이 사건 가산세가 부과된 것은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농지가 아닌 대지로 판단한 것과 더불어 이 사건 토지의 취득세를 신고하면서 누락한 비용 52,334,950원이 취득가액으로 포함시켰기 때문이나, 원고가 취득가액 부분에 관하여는 아무런 주장을 하지 않고 있고,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아무런 위법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

6.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가산세 부과처분 결정세액 24,368,740원을 초과하는 가산세 부과처분의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

판사 박○○

판사 성○○



별지

관계 법령

■ 구 지방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과세표준)

-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상속으로 인한 취득

가. 농지: 1천분의 23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28

2. 제1호 외의 무상취득: 1천분의 35.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의 취득은 1천분의 28로 한다.

3. 원시취득: 1천분의 28

4. 삭제

5. 공유물의 분할 또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의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이전으로 인한 취득(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1천분의 23

6. 합유물 및 총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 1천분의 23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가. 농지: 1천분의 30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제20조(신고 및 납부)

-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그 허가 일이나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일 또는 축소일을 말한다)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 지방세법 시행령

제21조(농지의 범위)

법 제11조 제1항 제1호 각 목 및 같은 항 제7호 각 목에 따른 농지는 각각 다음 각 호의 토지로 한다.

1. 취득 당시 공부상 지목이 논, 밭 또는 과수원인 토지로서 실제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이 경우 농지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농막)·두엄간·양수장·못·늪·농도·수로 등이 차지하는 토지 부분을 포함한다.
2. 취득 당시 공부상 지목이 논, 밭, 과수원 또는 목장용지인 토지로서 실제 축산용으로 사용되는 축사와 그 부대시설로 사용되는 토지, 초지 및 사료밭

■ 구 지방세기본법(2018. 12. 24. 법률 제160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기한 후 신고)

- ①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법」에 따라 그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법 및 「지방세법」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에는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이하 "기한후신고서"라 한다)를 제출할 수 있다.



제52조(가산세의 부과)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제53조(무신고가산세)

-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과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가산세와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가산세의 계산 및 그 밖에 가산세 부과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4조(과소신고가산세·초과환급신고가산세)

-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로서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보다 납부세액을 적게 신고(이하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면서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초과환급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환급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제55조(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

- ①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한 경우 또는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이 경우 가산세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 또는 초과환급분(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times$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부과결정일까지의 기간 $\times$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2. 초과환급분 세액 ×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부과결정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이자율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법」 제66조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으
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여의제이익이
변경되는 경우(부정행위로 인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경정하는 경우는 제
외한다)에 해당하여 「소득세법」 제88조 제2호에 따른 주식등의 취득가액이 감소됨에 따
라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를 과소납부하거나 초과환급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가산세
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7조(가산세의 감면 등)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
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